

(2026년 8월 28일 금요일 2면)

지정수 송파구의원

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안 점검 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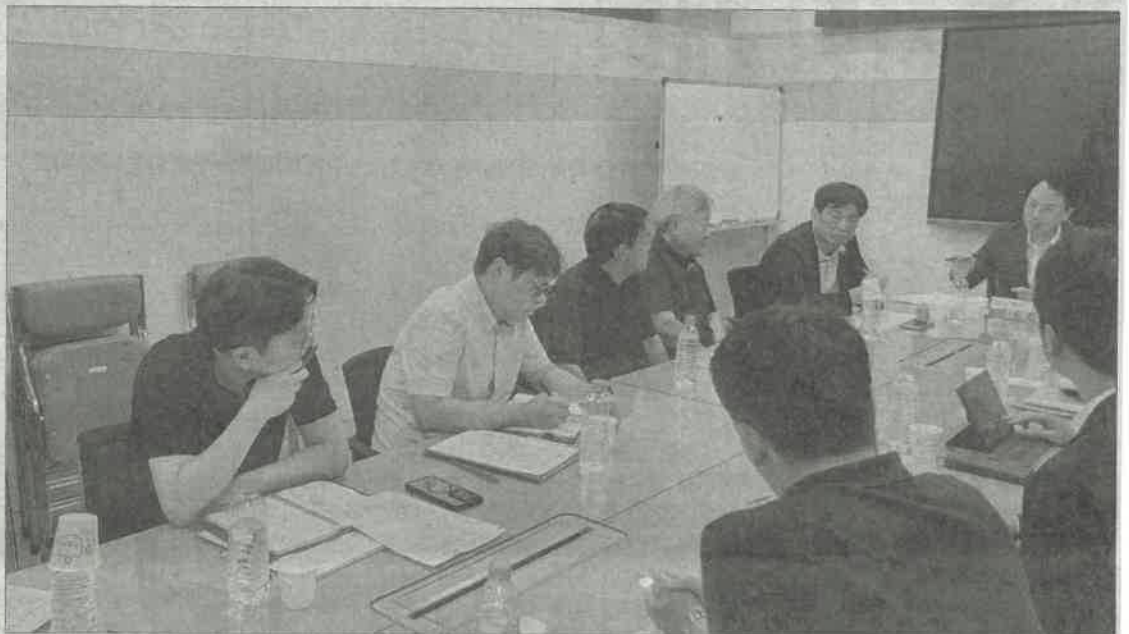
감정평가 형평성·투명성 촉구
주민 재산권 보호 위한 점검

송파구의회 지정수 의원(장지·위례동)이 거여·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관련 민원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지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대표 이병철 회장을 비롯해 송파구청 담당자, LH 사업담당자, 감정평가법인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.

이번 간담회에서는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구역 내 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△주택 유형별 감정평가 형평성 문제 △국·공유지 및 LH·SH 등 공공기관 소유 토지·주택 현황과 사업 과정에서의 처리방식 △주민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관리·감독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.

우선 다가구·단독주택 소유자와 다세대주택 소유 권리자 간 감정평가 형평성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.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 산정 등 주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, 참석자들은 감정평가 평가기준, 주택 유형별 평가방식의 차이,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



지정수 송파구의원

송파구의회 지정수 의원(오른쪽)이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관계자 및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다.

이의제기 절차 및 재감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.

아울러 구역 내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LH·S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와 주택의 현황과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.

또한 지 의원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주민과 사업시행사 간 다리 역할을 하는 주민대표회의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 공개,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다.

지 의원은 “공공재개발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, 오랫동안 지

역에 살아온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평가와 분담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”라며 “감정평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추가 분담금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인 만큼 평가기준과 절차에 대한 주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했다.